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본원	직 위	선임연구위원	성 명	이택면
출장기간	5/17-5/21 (3박 5일)		출장지	아이슬랜드 레이캬비크		
출장목적	- OECD 주최, 회원국 성인지예산 전문가 미팅 참석 - 한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사례 토론 - 해외 성인지예산제도 선진사례에 대한 이해 및 한국 경험 공유					
경비부담	본원부담: 4,145천원 (이택면 선임연구위원 1인)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문기관 및 면담자				주요 논의사항		
주최 : OECD,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 Division 발표 및 토론 : OECD, UNwomen, IMF, 아이슬랜드·캐나다·오스트리아·스웨덴 등 회원국 재정당국 면담자: Michael Kallinger 오스트리아 연방 총리실, Justin Ackman 캐나다 여성지위실, Ronnie Downes OECD 부국장, 외 다수				- 회원국 성인지예산의 다양한 제도적 틀 소개 - 성인지예산 및 성평등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계량연구 소개 - 성인지예산 선도국(early champions,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의 모범사례 소개 - 성인지예산 케이스 스터디 발표: 오스트리아, 레이캬비크, 베를린, 멕시코 - 국제기구의 성인지예산제도 지원 사례 소개: UNwomen, IMF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7. 6. 2.

출 장 복 명 자 : 이 택 면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OECD 주최 Experts Meeting on Gender
Budgeting

2017. 6. 2.

보고자 : 이택면

성인지예산센터 선임연구위원

※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상세내용은
성인지예산센터 이택면 연구위원에게 문의바람 (02-3156-7167)

1. 출장개요

- OECD 공공커버넌스 사무국(Directorate of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주최 고위 예산당국자 회의 정례회의로서 2017년 5월18일, 19일 양일간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개최된 성인지예산 전문가 회의(Experts Meeting on Gender Budgeting)에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의 요청에 의해 한국측 대표로 참석.
- 발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OECD회원국의 성인지예산 운영 사례 및 UN Women,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성인지예산 관련 지원과 가이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의 성인지예산 운영사례를 홍보.

▶ 방문지: 레이카비크 Foss호텔, 아이슬란드

▶ 회의 일정 : 2017.5.18. - 19.

날짜	일정	비고
5/17 (수)	◆ 출국 인천(한국) → 런던(영국) 런던(영국) → 레이카비크(아이슬란드)	
5/18 (목)	◆ 컨퍼런스 참가	SESSION 1 - Institutional framework for equity: towards gender budgeting SESSION 2 - Measuring the impact of gender-sensitive policies and budgets on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well-being SESSION 3 - Lessons from “early champions” in gender budgeting SESSION 4 - Gender budgeting: case studies
5/19 (금)	◆ 컨퍼런스 참가	SESSION 4 - Gender budgeting: case studies, continued SESSION 5 - Gender Budgeting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SESSION 6 - Synthesis discussion
5/20 (토)	◆ 레이카비크(아이슬란드) → 파리(프랑스)	
5/21 (일)	◆ 입국 파리(프랑스) → 인천	

2. 발표 및 논의 내용 요약

○ 5월 18일

- 기조연설 (B. Johannesson, 아이슬란드 재정경제부 장관)(9:45 - 10:00)

아이슬랜드는 2009년에 성인지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중. 예산법(the New Organic Budget Law) 제 18조에 성인지예산제도 명시함. 재정경제부는 성평등과 관련있는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성인지예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예산안 제출시 성인지예산프로그램을 고려한 예산안을 제출하며 성인지예산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를 명시하도록 규정. 예산법에 따르면 34개 지출분야가 있고 각 부처는 이들 분야별로 최소 5개년간의 정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정책계획에는 어떤 성과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는데, 여기에 성인지예산과정을 통합하여 보다 더 성과지향적인 제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중임. 또한 성인지예산 원칙이 모든 예산과정에 적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그 적용 사례로 북부 아이슬란드 지역의 두 마을을 연결하는 터널 건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사업방향과 내용을 수정한 경험을 제시.

- 제1세션: 성인지예산의 제도적 틀 (R. Downs & S. Nicol)(10:00-11:00)

OECD는 성인지예산을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도구의 하나로 간주하고 세가지 단계의 성인지예산 과정을 구분. 선행단계-동행단계-후행단계가 그것임. 선행단계(ex ante)는 사전성별영향평가, 예산기조분석(budget baseline analysis), 젠더요구분석(gender needs assessment)로 이루어지고, 동행단계(concurrent)는 성과목표 설정, 자원배분, 예산수혜분석(budget incidence analysis)으로 이루어지고, 후행단계(ex post)는 사후성별영향평가, 젠더감사, 지출분석(spending review)로 이루어짐. 이들 세 단계의 성인지예산 과정을 모두 준수하는 나라는 거의 드문 실정임. 2016년 회원국 서베이 결과, 34개 회원국 중 15개 국에서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계획(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됨. 성인지예산을 시행 중인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사전 성별영향평가, 성과목표 설정에서 젠더관점 반영, 자원배분과 예산기조분석에서 젠더관점 반영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2그룹 국가(예산에 성평등 관점 반영하는 국가)로 분류됨. 그러나 오스트리아나 스웨덴 등과 같이 성과예산제도와 연계되고 젠더감사까지 수행하는 국가의 성인지예산제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OECD가 제안하는 성인지예산제도 거버넌스는 정부내 핵심행위자(재무부, 총리실 혹은 대통령실), 정부내 보조행위자(평등관련 부처, 일반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독립적 감시기관(의회, 감사원), 시민사회(NGO, 시민단체)로 구성됨. 즉, OECD가 제안하는 전형적 거버넌스는 재정당국이나 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을 갖는 기관(총리실 혹은 대통령실)이 제도를 이끌고가는 핵심이 되고 거기에 일반행정부처의 조력(여가부를 포함)과 독립기관의 감시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덧붙여진 형태임. 즉, 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 확립, 제도를 이끌고 나갈 강력한 리

더십의 핵심 부처 지정, 부처간 효과적인 조정 메커니즘 세가지를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공열쇠로 제시. 특히 OECD는 재무부가 강력한 리더십 역할을 하는 집중화된 성인지예산 모델의 전형으로 한국을 지목. 그 반대편에 각 개별 부처가 완벽한 자율성을 가지고 부처내 성평등 정책을 책임지는 분권화 모델의 전형으로 독일을 지목. 집중화 모델에서는 어떻게 개별 부처의 협조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분권화 모델에서는 어떻게 국가 전체 수준의 성평등 목표와 전략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것인가가 각각 향후 과제임을 적시. 동시에 외부 감시자들의 비판적 시각을 어떻게 정책과정에 통합시킬 것인지와 성인지예산 관점이 어떻게 전체 예산 싸이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인가를 추가적 과제로 제시함.

- 제2세션: 성인지적 정책과 예산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에 미치는 영향(H. Morais 유럽성평등연구원(EIGE) 성주류화연구자)(11:45-13:00)

정책 영역에서 성불평등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게 됨. 그러므로 성평등 정책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주류화도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임. OECD회원국 성평등 지표와 각종 경제지표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성평등 수준이 천천히 상승하느냐 빠르게 상승하느냐에 따라 2030년에는 고용률이 최소 0.5%포인트에서 최대 0.8%포인트까지, 2050년에는 최소 2.1%포인트에서 최대 3.5%포인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결과적으로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이 최소 1.5%에서 최대 2.2%, 2050년에는 최소 6.1%에서 최대 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제3세션 : 성인지예산 선도국의 모범사례 소개(H. Forslint 스웨덴 재무부 부국장, B. Moosang 캐나다 재무성 선임자문위원, M. Cabellero 스페인 재무부 성인지예산담당)(14:00-15:15)

*스웨덴: 스웨덴의 신정부는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방. 스웨덴은 성평등 달성을 위해 노력해온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정권 차원의 강한 의지. 성인지예산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예산과정의 전 수준에 걸쳐 성인지적 관점을 관철시키고 “세입과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성평등 증진을 실현하는 것. 이를 위해 최근 스웨덴은 예산편성지침(budget circular)에 성평등 관점의 작성항목을 포함시킴. 향후 과제는 성인지예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 형성 초기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임.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정부 차원의 성평등·성주류화 드라이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여성지위실이 하고 있는 상황임. 여성지위실(Status of Women Canada)은 부처에 전달하는 지침을 통해 각 부처의 재정관리 및 성과보고 서식에 성별영향평가(Gender-Based Analysis+)결과를 포함시키도록 권고. 여성지위실에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처는 그 교육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역량을 길러서 양질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반영. 성평등 관련 성과 측정, 평가 및 분석을 강화하여 정부 정책의 성평등 목표 지향성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성평등 목표를 예산

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결과에 초점을 맞춘 성인지예산제도로 탈바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

*스페인: 성인지예산제도는 별도의 부가적 제도가 아니라 여타 다른 재정제도와 잘 연계되고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임. 스페인 역시 예산서(general state budget) 제출시 각 예산사업의 성평등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음. 2007년 기본법(Organic Law)에 실질적 성평등 원칙 명시, 2009년 칙령(Royal Decree)을 통해 성별영향분석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 확립. 현재 재정경제부령(Annual Order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을 통해 각 부처의 모든 지출프로그램에 대한 성평등영향보고서를 각 부처 예산서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 제일 먼저 각 부처에서 개별 지출프로그램에 대한 성평등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당국(State Secretary of Budget)에 제출하면 예산당국은 건강·사회서비스·평등부(the Ministry of Health, Social Services, and Equality)의 협의와 검토를 받은 후 최종 프로그램별 성평등영향보고서를 초부처 워킹그룹에 보내고 워킹그룹은 전체 부처의 프로그램별 성평등영향보고서를 종합 수정하여 국가예산 전체에 대한 최종 성평등영향보고서를 작성, 예산당국에 제출하고 예산당국은 이를 의회에 제출. 성평등영향보고서는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모든 지출프로그램을 네거티브(불평등 개선효과 없음), 제로(불평등 없음), 포지티브(불평등 개선효과 있음)로 분류. 2016년 현재 전체 중앙부처의 209개 프로그램 중 103개가 포지티브로 분류됨. 이러한 성평등영향보고서의 질을 더욱 높이고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페인의 향후 도전과제임.

- 제4세션: 성인지예산 케이스 스터디 1 (F. Schwarzenborfer 오스트리아 재무부 국장, D.B.Eggertsson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시장)(15:45-17:15)

*오스트리아 사례 : 2009-2013년에 걸쳐 오스트리아는 대대적인 재정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중장기 시계 및 성과주의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예산·재정제도를 도입. 성과예산제도·정부부처 사업의 성과중심적 관리·발생주의 회계도입·총액예산제도 등 4가지를 핵심 개혁 요소로 추진. 이러한 재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재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동시에 추진함. 각 부처마다 연도별 예산서에는 각 예산분야(budget chapter)별로 1-5개의 성과목표(전략목표)를 두고 그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성평등 관련 목표로 수립하도록 하며, 그 하위에 다시 각 전략목표별로 1-5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명시(역시 그 중 하나 이상은 성평등 관련 프로그램 목표여야 함. 이때 외부적·사회적 목표와 내부적·부처특수적 목표를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음). 예산서에 첨부되는 세부 예산설명자료에는 각 프로그램 별로 그 하위에서 추진해야할 목표(결과)와 성과지표를 명시함. 이러한 제도적 틀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공공지출 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 즉, 효율성만을 지향하는 지출구조조정이 아니라 성평등과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임. 한편 오스트리아는 성인지예산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유일한 국가임. 13조는 모든 오스트리아 정부는 예산관리에서 남녀의 실

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51조에서는 특히 연방정부의 예산관리에서 남녀간의 실질적 성평등을 포함하는 성과지향적 예산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갖추고 추진된 성과중심 재정개혁과 성인지예산제도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공적 가치를 갖는 성과목표의 하나로서 성평등을 설정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과 활동을 그 성과목표의 달성에 기여한 정도로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음. 개별 부처의 기획재정담당관, 개별 사업담당자, 기재부, 국무총리실, 감사원간의 성과관리 및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임.

*레이카비크 시 사례: 레이카비크시는 2011년에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성인지예산 조정위원회(steering group)를 설립. 아이슬랜드는 인권정책의 일환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 조정위원회에서는 주요 시책에 대한 성평등관점의 분석,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고 성평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예산의 배분과 집행을 유도, 모든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고자 체계적으로 노력 중임. 구체적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시의 모든 주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고 승인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인지예산에 반영. 그렇게 하기 위해, 시의회가 예산을 변경하거나 기존에 없던 예산항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나 성별영향분석을 거치도록 예산규칙을 변경. 젠더 이외의 다양한 차별차원(intersectionality)을 고려하는 입체적 성별영향분석을 하는 방법론적 틀을 개발하는 것과 성별영향분석의 확대에 의한 공무원의 업무 과중 해소가 향후 과제.

○ 5월 19일

- 제4세션: 성인지예산 케이스 스터디 2 (T. Puhst 베를린시 재무부 예산재정국장, A.G. Lozano 멕시코 재정부 정책예산통제국장)(09:15-10:45)

*베를린 시 사례 : 베를린 시는 1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시장과 시정부 각료(senators)를 선출하면, 이들이 베를린 시 행정을 담당함. 시 행정부는 시장과 10개의 부처(senate offices)로 구성됨. 보건, 복지급여, 도로건설 및 보수, 공원 등은 연방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에 해당. 성인지예산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음. 우선 시의회에서 시 행정부에 성평등 정책수행을 강제하고 시행정부에서는 성평등위원회(secretary committee on gender equality)을 통해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를 접수함.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는 성인지예산작업반(GB working group)에 의해 작성되는데, 작업반 의장은 시 재무부와 성평등부의 관료가 공동으로 맡고 시 행정부 중 노동부, 사회통합부, 내무부, 교육부 등에서 파견된 관료와, 시 자치구 대표, 의회, 외부 전문가 등이 작업반원으로 참가함. 작업반에서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등 여러 젠더 정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 그러나 이것은 별도의 보고체계가 아니라 정례적인 연간 예산편성과정에 통합되어 있음.

*멕시코 사례 : 멕시코는 헌법에 성평등 원칙을 명시하였고 2011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제규범으로서의 성평등 관련 원칙들을 제1항에 명시함. 또한 2006년에는 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에 성평등 관련 정책과 조치를 설계하고 시행할 책무를 부과함. 평등과 차별철폐를 위한 국가프로그램(2013-2018) 개정을 통해 성평등 관점을 모든 정부정책(6개 국정목표, 36개 전략목표, 314개 프로그램 목표, 18개 지표)에 적용할 것을 규정. 이와 더불어 예산·재정책임법(Budget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구조, 연방세출예산 편성과정, 성과평가체계 등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규정. 즉,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부처 정책(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결과 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을 달성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전략프로그램으로 6개 프로그램(고령자 대상 이전지출, 취업모를 위한 보육지원, 국가 장학프로그램, 중소기업 지원, 성·생식·모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택지원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함. 또한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업무 및 공무원 조직의 성평등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행정부 내에 젠더유닛(gender unit)을 둬. 현재 27개 젠더유닛이 설치되어 활동중.

- 제5세션: 국제기구의 성인지예산제도 지원 사례(Z. Kahn 유엔위민 정책 자문위원, T. Curristine IMF 재정국 선임 경제학자)(11:15-12:15)

*UN Women: 유엔위민은 지속발전목표5(SDG 5) 중 5c목표(성평등 증진과 모든 수준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강화를 위해 충분한 정책과 실행가능한 법률을 채택하고 강화해야 한다)를 통해 성인지예산 제도 시행과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각국이 이 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지표5c1을 설정. 이 지표는 성평등과 여성 권한강화를 위한 공공재원의 규모를 파악하고 추적하기 위한 지표임. 이 지표의 구축을 위한 방법론 개발 등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유엔위민과 OECD UNDP임. 이 지표는 각국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재원을 성평등에 투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지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지표임. 즉, 성평등을 위한 재원투자에 정부가 얼마나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명확한 성평등 목표가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가?”, “이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에는 성평등 목표를 포함한 사업의 고유 목표들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재원이 배분되어 있는가?” “정부(총리실 혹은 예산당국)는 명확히 정의된 성평등 목표를 성인지예산서에 포함시키는가?” “예산당국은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관련한 지침을 발행하는가?” “주요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예산요구서 사전 성별영향평가를 거치는가?” “성별분리통계가 적절하게 추적되고 사용되고 있는가?”, “성과목표 설정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도록 강제되고 있는가?”, “주요 프로그램이나 정책은 사후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는가?”, “전체 예산은 별도의 독자적인 젠더관점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있는가?”, “성평등 관련 예산배정 결과는 제때에, 접근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적절한 자료형식으로 일반에 공표되고 있는가?” 이상의 질문

들에 대한 회원국의 답변을 기초로 각국에 지표값을 부여함. 그러나 성평등과 여성 권한부여를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 활용가능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마지막으로 유엔위민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을 위해 각 회원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권고함. “재무부 고위층의 적극적 참여와 조정역할, 역량강화와 기술적·방법론적 지원, 세입 측면과 지방정부 차원의 포함, 성과예산제도와 연계, 활용성 높은 개방형 데이터 축적”.

*IMF : IMF는 2017년 “G7국가의 성인지예산”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이 보고서는 각국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아울러 성인지적 재정사업을 충실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정관리제도(Public Financial Management)와의 통합 방안을 보여줌. G7국가들은 성평등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재정정책(조세정책+재정지출 사업)들을 추진해옴. 성인지적인 재정관리제도 역시 성평등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도구인데, 성인지예산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성인지적 재정관리제도라 할 수 있음. 재정관리제도와 잘 통합된 성인지예산제도는 기존의 정책 프로그램을 더 포용적·이되도록 재설계하거나 더 많은 포용적 프로그램들을 신규 추진할 수 있게 해주고, 중장기시계를 가지고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주며, 성과예산제도와 연계되면 보다 더 결과지향적인 재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줌. 성인지적 재정관리제도는 새로운 예산과정을 개발하여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재정관리 절차를 개편하고 새로운 도구(tools)를 적용하는 것임. 즉 모든 예산 사이클에 젠더적 접근을 통합하는 것임. 이를 위한 도구로서 성평등목표 천명, 예산편성지침 개편, 성별영향평가, 성과지표 개발, 예산안 작성, 사후평가, 결산감사 등을 제시. 중기재정운용계획 작성 시 국가 성평등 목표 및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시해야할 자원배분 분야 설정. 예산요구서 작성 시 각 부처에게 부처 성평등 목표 제시하는 예산편성지침 배포, 성인지적 예산분류체계 확립, 부처간 조정작업, 사전성별영향평가 실시, 성평등관련 성과지표 설정, 예산요구서 작성.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중간 모니터링 및 최종 집행결과 보고시 성평등관련 프로그램의 집행결과 함께 보고. 결산보고 단계에서는 성과보고서에 프로그램의 젠더 영향 적시, 사후평가 위한 도구 개발, 성별분리통계 축적 및 활용. 결산 감사 단계에서는 성평등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 및 심층평가, 지출리뷰(Spending review)를 통한 성평등 사업 재편 및 개선 방안 발굴. IMF는 이 각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적·방법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3. 시사점

- 성인지예산 제도를 국가 성평등목표 수립, 부처 성평등 목표 수립과 연동시켜 부처 성과관리체계 내에서 성평등 관련 사업들을 함께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도 더욱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성평등 지향적 재정관리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가이드에 따라 많은 서구 신진국 및 개도국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제도개선 방향임을 확인하였음.

- 다만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그동안의 제도 발전 경로를 고려할 때, 급격한 성과예산제도와 연계 혹은 급진적인 부처 자율성 확대 등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시사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즉 제도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의 측면과 제도의 실질적 내용 측면이 그것임.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위한 각종 행정 및 조정 역할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 있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이 역할을 중앙정부의 예산당국(기재부)가 확고하게 수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centralized model의 국가로 알려져 있음. 성인지예산제도가 재정관리제도의 한 축으로 잘 통합되어 수행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동의된 규범에 비추어볼 때 향후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에서 기재부가 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하나의 쟁점은 예산당국인 기재부와 정부업무 평가 당국인 총리실 사이에서 성인지예산 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성평등 지향성 강화를 위한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임. 나아가 여기에서 신정부 들어 공양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라는 쟁점도 또한 중요하게 숙고되어야 할 쟁점임. 또한 기재부나 총리실이나 성평등위원회에서의 주도적 역할 혹은 조정 역할의 중요성 못지 않게 여타 중앙행정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어떻게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자발적 성평등 사업 추진 유인을 강화시킬 것이냐 라는 문제 또한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쟁점임.
- 마지막으로 제도의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의 쟁점은 어떻게 성인지예산제도의 거시 싸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성평등 목표 수립 - 부처 성평등 목표 수립 - 부처 성과관리 - 피드백의 과정을 원활하게 기존 재정관리제도와 잘 통합된 상태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오스트리아의 사례가 벤치마킹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전략목표, 부처별 전략목표, 부처별 프로그램 및 정책 등등 다양한 수준에서 양질의 성평등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분석평가 방법론이 개발되고 합의되어야 함.

